

日 오늘부터 백색국가 제외 강행...정부, 추가 규제 예의 주시

대부분 품목 개별허가...불확실성 커져
피해 우려 업종 지원 등 부처별 점검
정부, 일본 백색국가 제외 의견 수렴

28일 한국이 일본의 백색국가에서 제외됨에 따라 정부도 개별품목에 대한 추가 수출규제 시행 여부에 촉각을 기울이며 내부 기반 다지기에 들어갔다. 당장 28일부터 일본이 추가 규제 품목을 지정하는 등 보복 조치에 나설 가능성은 작지만, 식품과 목재를 제외한 대부분 품목이 포괄허가에서 개별허가 대상으로 전환되면서 불확실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한국 수출이 9개월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할 것이 확실시되는 상황에서 일본의 백색국가 제외라는 악재가 겹쳐 단기적으로는 국내 산업계가 한층 더 위축될 가능성이 있다. 정부는 일본이 어떤 방식으로 어떤 품목을 규제할지 모니터링하면서 추가경정 예산을 통해 확보한 자금을 피해 우려 업종에 신속하게 지원하는 등 일본의 조치로 인해 국내 산업이 흔들리지 않도록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정부는 일본의 백색국가 제외 시행을 하루 앞둔 27일 여러 상황을 가정한 시나리오별 대책을 짜놓고 범부처별 점검에 들어갔다. 한국이 일본 백색국가에서 제외되면 전략물자 1194개와, 비(非)전략물자라도 군사용으로 전용할 수 있는 품목은 대(對)한국 수출 시 일본 정부의 개별허가를 받아야 할 수 있다. 정부는 전략물자 중 상대적으로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159개를 집중관리 품목으로 지정했다. 업종별로는 화학 40여개, 반도체와 기계 20여개, 금속 10여개 등이 포함됐다.

민관 소재부품 공급대응 지원센터는 백색국가 제외 시행에 대비해 해당 품목을 수입하는 국내 기업에 대한 전수조사를 시행했으며 일본의 조치로 인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일대일 밀착지원을 할 방침이다.

28일 당일에는 백색국가 제외 발효에 따른 당정청 회의 등을 통해 관계부처 합동 대책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소재·부품 연구개발(R&D) 투자전략 등 대책 추진상황을 논의한다. 정부 관계자는 "백색국가 제외로 영향권에 들 수 있는 159개 품목을 미리 지정해 관리하는 만큼 당장 일본에서 수입하는 품목 대부분이 개별허가 대상이 될까 봐 지레 불안해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일본이 반도체 소재 3개 품목을 지정해 규제했던 지난달과 달리 백색국가 제외에 따른 영향은 당장 가능해지기 쉽지 않다.

일본 내에서도 일본이 한국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등의 조치에 맞받아쳐 추가 보복을 할 수 있다는 의견과 일본 산업계에 미칠 영향 등을 고려해 속도 조절에 나설 것이라는 의견이 공존한다.

불확실성이 커지는 만큼 단기적으로는 충격이 불가피하다. 한국 수출은 지난해 12월부터 8개월 연속 하락세이며 8월 수출 역시 상승 전환은 어려울 전망이다. 관세청은 지난 1~20일 수출이 13.3% 감소했다고 밝혔다. 지난 7월은 일본 수출규제에 따른 영향이 제한적이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영향력 또한 점차 커질 수 있다. 만약 일본이 규제 대상 품목 추가 지정에 나서거나 핵심 품목의 대한국 수출을 지연한다면 한국 산업이 받은 타격은 한층 확대될 수 있다.

산업계로서는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미중 무역분쟁과 이에 따른 중국의 수요 축소로 이미 어려운 통상환경에 악재가 하나 더해지는 셈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추가 보복을 하지 않더라도 불확실성이 커지고 글로벌 무역환경이 나빠지면 1차

타적이었던 반도체 소재 업체뿐만 아니라 다른 업종에서도 기업활동에 어려움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산업연구원은 일본에 대한 의존도가 높고 단기간 대체가 어렵거나 대체하더라도 협정 적용까지 시간이 걸리는 품목은 전체 대(對) 일본 수입액의 약 8%를 차지하는 것으로 분석했다. 다만 "기업의 신뢰성 상실을 거머쥔다면 변화가 이뤄지고 일본 기업의 독과점 체제가 붕괴하면 오히려 일본의 수출규제가 자국 산업의 기반을 약화하는 부메랑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 역시 중장기적으로는 일본의 수출규제를 한국 소재·부품·장비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계기로 삼는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 대책을 통해 혁신형 연구개발(R&D) 지원,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인수·합병(M&A) 자금 지원, 수입 다변화 등 가능 가능한 정책 카드를 모두 동원하고 총 45조원에 이르는 예산·금융을 투입하기로 했다.

일본에 대한 대응조치도 차근차근 준비해나가고 있다. 정부는 일본을 한국의 백색국가 명단에서 제외하는 방안에 대해 다음 달 2일까지 의견수렴을 한다. 시행은 다음 달 중순께가 될 예정이다. 구체

적인 수치는 공개하지 않았지만 적지 않은 의견이 모였고 '찬성' 의견이 우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본을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는 방안도 속도를 내고 있다. 시행 시점은 여러 정황을 고려해 전략적으로 선택한다. 산업부 당국자는 "법리 검토 등 실무는 거의 다 했다"면서 사실상 제소를 위한 준비를 마친 뒤 시점을 저울질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한편, 세코 히로시게 일본 경제산업상(경상상·장관)은 한국을 수출 관리상의 우대 대상인 '그룹A'(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령을 28일부터 시행하겠다는 입장을 27일 확인했다.

세코 경산상은 이날 각의 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한국에 대한 수출관리 엄격화 정책을 "엄숙하게(조용히) 운용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한국이 부당조치라고 반발하는 것에 대해선 "수출 관리를 적절하게 실시하기 위한(국내) 운용의 재검토"라고 거듭 주장했다. 이어 "한일 관계에 영향을 주는 것을 의도하고 있지 않다"며 징용 배상 판결에 대한 보복조치라는 견해를 부정했다.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내일부터(개정 수출무역관리령)가 시행된다"고 확인했다.

/연합뉴스

광주시, '국방드론' 특화산업으로 육성

市·31사단·드론산업진흥협회 등과 업무협약 체결

4차산업혁명 시대 미래먹거리 육성
첨단산업 발전·새로운 일자리 창출

광주시가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떠오르는 드론산업을 특화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차별화된 국방 특수목적용 드론 기술 개발을 추진한다.

광주시는 27일 이용섭 시장과 소영민 제31보병사단장, 박상규 한국드론산업진흥연구원 부원장, 조문수 한국드론산업진흥협회장, 김지찬 LIG넥스원(주) 대표이사가 참석한 가운데 시청 비즈니움에서 '국방드론 산업육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체결은 광주시 11대 지역전략산업 중 하나인 드론산업을 4차산업혁명 시대의 고부가가치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육성하고 지역 내 첨단 산업 발전과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위해 추진됐다.

업무협약을 통해 군(軍)이 필요로 하는 특수임무 장비 수요를 제31보병사단이 제안하고, 이를 국가 ICT연구개발을 총괄하는 한국전자통신연구원과 종합방위산업체인 LIG넥스원(주)에서 기술개발 후 광주시와 한국드론산업진흥협회가 광주 특화산업으로 발전시킨다는 구상이다.

광주시는 국방 특수목적용 드론 개발과 테스트를 위한 ICT기술 실증기반 민·관·군 협력 체계를 구성한다.

국방드론에 특화된 대기업, 협회, 연구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타 지역과 차별화된 지역특화 전략을 구사하고 지역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를 기반으로 농업, 수산업, 축산업, 물류, 방송, 문화, 레저, 스포츠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무인기 서비스 사업이 활발하게 전개될 수 있고 4차 산업혁명의 핵심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함께 광주시는 제31보병사단, 북구와 지난 5월 '광주 드론산업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한 드론 테스트베드 구축 관련 협약'을 체결하고 제31보병사단 내에 10월까지 드론 테스트베드를 구축을 완료할 예정이다. 향후 지역 연구기관, 기업 및 군 관련 기술개발 등의 공간으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이용섭 시장은 "드론산업은 정보통신, 항공, 소재 분야 등 최첨단 기술을 총 망라한 핵심산업으로 광주시의 미래성장 동력으로 꼭 필요한 산업이다"며 "앞으로도 4차 산업혁명 선도도시로 나아가기 위한 새로운 먹거리와 일자리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27일 도청 서재필실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전남도 당정협의회'에 참석한 김영록 전남도지사,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도당위원장, 우기중·서갑원·주철현·신정훈·김승남·윤재갑·정기명 지역위원장, 이용재 도의회의장, 이민준·김한중 도의회 부의장이 기념촬영하고 있다. /연합뉴스

블루이코노미·지역 핵심 현안 예산 지원 건의

전남도, 민주 전남도당 당정협의회

전남도가 민주당 전남도당과 지역 핵심 현안 해결과 내년도 국비 확보 방안을 모색했다.

전남도는 27일 도청 서재필실에서 민주당 전남도당과 '2019 하반기 민생현안 해결을 위한 당정협의회'를 열고 지역 현안과 일본 수출 규제로 인한 기업 지원 대책 등을 논의했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일본 수출 규제로 인한 전남도 차원의 지원·대응 전략을 점검하는 한편, 전남

의 핵심 현안에 대한 예산 지원 방안을 모색했다.

협의회에는 김영록 전남지사를 비롯, 서삼석 민주당 전남도당 위원장, 주철현(여수·갑)·신정훈(나주·하순)·이용재(광양·곡성·구례)·김승남(고흥·보성·장흥·강진)지역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전남도는 이 자리에서 민주당에 핵심 현안인 블루이코노미에 대한 예산 지원과 ▲남해안 신성장 관광벨트 조성사업의 국가 계획 반영 ▲한전공대 설립 지원 ▲대규모 해상풍력발전단지 민간 투자 활성화 ▲국가 첨단의료 복합단지 지정 ▲완도·고

흥 국도 승격 ▲혁신공항 조기 건설 ▲여수·순천 10·19 사건 특별법 제정 등 14건의 정책에 대한 관심을 요청했다. 전남도는 또 ▲국가 유무인기 인증통합 관제 인프라 구축 ▲바이오헬스 융복합 조기 착공 ▲남해안철도(목포·보성) 전철화 ▲경전선(광주송정·순천) 전철화 ▲빛가람혁신도시 종합병원 유치 지원 등 11건의 현안 사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국비를 제 때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해 줄 것을 건의했다. 민주당 전남도당도 각 지역위원회별로 수렴한 건의사항을 전남도에 전달했다. 한편, 민주당은 오는 10월 서울에서 하반기 사도 예산정책협의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모던 슬라브옥상 칼라강판 지붕공사 및 스틸방수

옥상지붕공사

옥탑이 없는 평 슬라브
주택 및 한옥 등은 칼라강판 지붕공사



옥상 스틸방수

갈라지고 물이 새는 옥상바닥
겨울의 차가운 냉기! 여름의 뜨거운 열기!
방수와 단열 한번에 해결!



옥상지붕공사 및 스틸방수 무료견적 디자인 등록 제 30-0934833호 제 30-0949873호 특허청

모던건설 (트윈스틸) 사공문의 062)531-3530 H.010-9229-3530

광주보청기 난청센터

보청기

무료체험·출장

직접 체험 후 결정!!

✓ 잡음없이 깨끗한 소리

✓ 윙윙~ 울리지 않는 보청기

062)362-3336

광주 돌고개 2번출구 대형약국 3층